

서울시, 한강-도심 단절 극복 나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검토

2026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구성
간선도로 기능 저하로 연계방안 추진
일반도로 전환·상부 공간 활용

서울시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재구조화 검토에 착수한다. 간선도로로 단절된 한강 수변 공간의 연결성을 회복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의 연계성을 높이면서, 한강변 간선도로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해 미래 교통량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내달 '한강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해 2026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강변북로(가양대교~천호대교 26.7km)와 올림픽대로(행주대교~구리암사대교 36km) 전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장거리 고속통행 위한 자동차전용도로로, 도심 교통을 외곽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시는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상습 정체로 간선도로 기능이 저하돼 한강변과 도심의 단절을 극복하는 연계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용역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한강 주변 주요 개발 계획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상암 재창조 프로젝트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올림픽대로 뚝개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 사업 ▲한강버스(리버버스) 사업 ▲반포·잠실·압구정 지역 대규모 정비사업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등을 고려 중이다.

시는 본 용역을 통해 한강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대한 재구조화안을 마련하고 일반도로 전환과 상부 공간 활용 방안을 살필 예정이다.

한강변 간선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한강 교량 진출입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개략적인 사업비와 자원 투입 방안, 관련 계획과 연계한 사업 우선순위도 도출할 방침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수도권 동서축의 차량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양재~고양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해당 도로는 상당 부분이 강변북로 지하에 대신도로 건설돼 향후 한강변 간선도로 교통량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포함된 교량 구간의 시설물 노후화와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 한강 조망 및 도시경관 개선안도 함께 도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전남도, '전라남특별자치도'로 명칭수정 요청

'전남특별자치도', 정체성 못 담아

전남 22개 지자체 시장·군수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명칭이 1000년 전라도 정체성을 오롯이 담아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로 명칭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결과와 주목된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 외 의원 17명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지난 6월11일 공동 발의해 현재 소관 위원회 접수를 거쳐 심사 단계에 있다.

이후 진행 절차는 체계지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이송→공포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특별법 발의 이후 각 시·군 지자체는 전남이 처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활력 증진에 필요한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 완화에 필요한 법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전라남도(全羅南道)'라는 명칭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지역의 정체성을 잃게



전남도는 지난 2018년 1월 14일 전라도 정도 천년을 앞두고 도를 대표할 천년나무로 해남 대흥사 소재 '느티나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청

된다는 우려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라도 명칭은 고려 현종 9년(1018년)에 전주(全州)와 나주(羅州)의 앞 글자를 차용해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8년은 전라도 정명(定名) 1000년이 되는 해였을 만큼 그 뿌리가 깊고 상징성 또한 크다.

이에 전주시와 함께 전라도의 양대 축인 나주를 대표해 윤병태 나주시장은 특별법 명칭 변경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용인시, 경부지하고속도로 예타성조사 통과

고속도로 건설, 지방도 318호선 연결
반도체 중심도시 위한 인프라 확보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 핵심 중 하나

용인특례시 시의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의 핵심 중 하나인 경부지하고속도로(용인기흥~서울양재)사업이 전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했다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시의 중점사업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기흥~고매~이동~서리 간 지방도 318호선 사업 등과 연결되는 것으로, 용인이 세계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경부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이용량이



경부고속도로와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예정지 전경 /용인시

폭주하는 경부고속도로 밑에 왕복 4~6차로의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용인특례시가 마련한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은 반도체 고속도로축(L1)과 두 개의 반도체 내륙도로축(L2, L3)으로 구성되는데, L1축은 경부지하고속도로와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

용인남사·이동~안성 일죽)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시는 경부지하고속도로 기흥IC가 있는 기흥구 고매동에서 이동읍 서리로 이어지는 지방도 318호선을 건설해 삼성전자 기흥캠퍼스·화성캠퍼스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최단거리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이 사업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6~30)'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는 특히 용인에 자리잡은 반도체 앵커기업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설계) 기업들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인적·물적자원 이동시간을 단축할 경부지하고속도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망의 대폭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용인(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서울시, 153만 소상공인 출산·양육지원 업무협약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시장에서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는 올 10월부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 휴업 기간중의 임대료·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중세트' 정책을 시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시장에서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는 올 10월부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 휴업 기간중의 임대료·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중세트' 정책을 시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서울시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 요구

온라인 민원창구 '시장에게 바란다'
송파구 신천동, 신통기획 제외 요청

서울시민들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청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민원 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에 송파구 신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접수됐다.

장미종합상가 소유자라고 밝힌 A씨는 "아파트 위주의 재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상가 소유주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신속통합기획 지구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잠실, 삼성, 청담, 대치동처럼 신통지구 지정과 상관없이 아파트 용도가 아닌 상가는 해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송파구 신천동 7번지 일대를 포함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예정지 10곳을 내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바 있다.

시는 "해당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건축사업 예정지로 주관 부서의 요청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신통기획(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에서는 개발 사업(절차)이 진행 중이어서 아파트 용도 외 상가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단기적인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정상화에 힘써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원인 B씨는 "북아현 2구역의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이후 관리처분 승인 직전에 서대문구청과 조합 간에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합원 1+1 분양 관련 갈등은 서울시(서대문구), 조합, 조합원이 소통과 토론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비사업에서 갈등이 발생해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상담하는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도움을 주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 중이다. 코디네이터는 ▲도시계획·건축 ▲도시행정 ▲도시정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 초·중·고등학교 시설, 주민과 공유

서울시교육청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
도서관, 수영장 등 공간 활용도 높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관내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수영장 등 공간을 인근 지역주민과 공유한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재학생과 지역민의 시설 이용 시간을 달리하고 출입 시스템을 정비해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시설과 지역시설을 공유해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Two-Block School)' 운영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공유학교 모델은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중심으로 학교블록(School Block)과 커뮤니티블록(Community Block)으로 구분된다.

두 개의 블록은 학교용지와 지자체부

지를 기준으로 ▲학교안의 학교블록(섹션1) ▲커뮤니티 블록(섹션2) ▲학교 밖 커뮤니티블록(섹션3)으로 나뉜다.

섹션1은 온전히 학교 교육만을 위해 학교장이 관리·운영하는 학교블록으로, 온전히 학교교육만을 위한 학교 전용 공간이다.

섹션2, 섹션3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며 자치단체장이 관리·운영하게 된다. 섹션2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공용 공간(학교용지)이며, 지자체 부지인 섹션3은 지역사회 전용이지만, 학교와 공유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교내 도서관과 주차장, 수영장, 체육관, 등이 커뮤니티블록에 해당하고, 학교 운동장과 식당 등도 '학교 안 블록'이 아닌 '커뮤니티 블록'으로 확대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교 밖 커뮤니티블록'은 지자체 공영주차장이나 어린이집, 어린이 돌봄센터 등이다. /이현정 기자 ihj@